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의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리포터'가 보내온 농촌 현장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수립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편집자 주>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요] 2018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KRE리포터를 대상으로 총 38건의 현장여론을 수집
- [주요내용] 농약 사용매뉴얼 보급, PLS교육 확대 시행, 잔류농약 검출기간 유예 등 요구
 - (농업인 PLS교육 확대 시행) PLS제도에 대한 이해와 작물별 세분화된 지침에 대한 교육이 부족, 특히 관행농업을 하는 고령농업인은 PLS교육 참여율이 저조, 현재 읍면단위 집체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단위 중심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 요망<김○○, 경기>
 - 예전에 비해 농약 남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농약 중독이나 사고 피해도 감소한 편이나 고령농업인의 경우 여전히 농약 사용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작위 살포하는 경우가 대다수, 농약회사나 관계기관에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농약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과 안전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요구<최○○, 충남>
 - 산골에 있는 고령농업인은 농산물을 소량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 상관없다며 PLS제도에 무관심한 실정, 현장에 와 닿지 않다는 평가, 농업기술센터 보다는 농약을 판매하는 농협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토록 개선 요구<송○○, 강원>
 - (작목별 농약 연구·개발) 작목별 사용가능한 농약과 정확한 잔류 허용수치도 안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PLS제도 시행은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 특히 특용작물은 농약 연구 대상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라 특용작물에 대한 등록비용 등이 추가 발생, 특용작물에 대한 농약 및 사용 매뉴얼 개발 요구<염○○, 경기>
 - 수요 및 생산량이 적은 품목은 농약 허용 약제가 적어 PLS 규제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 예상, 농약 하나를 연구하는 데 수반되는 시간 및 투자비용 많아 빠른 시일에 해결될지 의문, 비허용물질을 사용하는 농업인도 문제이나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을 파는 농약상에 규제를 강화토록 검토 요망<노○○, 전남>

- (올바른 농약 사용매뉴얼 보급) 농약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농업인에게는 농약 사용량을 줄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농약 판매상에게는 작물과 사용량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매뉴얼을 보급해 일관되도록 처방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농약 상품에 대한 성분 등을 단순화, 정제화 할 것을 요망<곽○○, 대구>
- (잔류농약 검출기간 유예) 우리 농업은 관행농으로 사용한 잔류농약이 오랜 시간 집적되어 있는 실정이라 내년에 PLS제도 시행은 성급하다고 판단. 토지개량이 우선 조치되고 시행되어야 마땅하며, 먼저 시행할 경우 잔류농약 검출기간을 유예토록 제도 검토가 필요<김○○, 경기>
- (토지 개량을 위한 농지 휴경기간 허용)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인식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한계, 친환경 농산물이 반드시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농약 관리 보다는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 토지개량을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농지 휴경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 요구<장○○, 경기>
- (농약 관리시스템 구축 및 판매상 관리감독)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을 구입하듯이 농약판매처에서 적용 작물에 대한 해당 처방을 받고, 처방한 농약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 약제 선택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십, 수백 명을 교육하기보다는 농약을 취급·판매하는 몇몇 판매상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김○○, 경기>
- 농업인은 농약을 이해하지 않고 농약상에서 권하는 제품을 구입해 사용, 개개인이 농약 허용물질을 지켜 나가기 어렵고 교육에도 한계, 농약 생산을 일원화하거나 농약 제조 및 처방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유○○, 충남>
- 정부는 철저한 검역과 통관으로 더 까다롭게 수입하고 PLS제도를 통해 농약 남용을 줄여 나가야 하며, 농업인과 특히 소비자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보호하고, PLS제도의 시행 후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임○○, 경기>
- 농촌의 고령화와 관행농업으로 PLS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일반적으로 농약상에서 주는 대로 받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부는 재배작물을 묻지도 않고 혼합제를 권장하기도 함.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농약을 처방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 전에는 자두를 사과, 복숭아에 준해 농약을 살포하였으나, 최근 식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작물 보호도우미에서 찾아 자두 전용 약제를 주문해 사용, 식약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약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농약관련 전문성을 강화토록 개선<이○○, 경북>

- (PLS제도 시행 전 비허용물질 수거·처분) 친환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GAP 농산물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허용치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유통과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나, 관행농으로 생산한 일반 농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PLS제도의 규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농약허용물질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이○○, 전남>
- 농업인 스스로 농약허용물질을 알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마땅하지만 PLS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에서 미리 농약상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수거·처분하고, 농가에서 다량 보유하고 있는 농약을 점검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김○○, 경기>
-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등록 약제가 없어 병해충 방제가 어려워 피해를 입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많은 농산물이 산지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많은 농업인이 우려, 반면 농산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수입 농산물에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 편 <임○○, 경기>
-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배추를 노지계약하거나 납품계약을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PLS제도에 긍정적,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농약허용 관리가 필요<유○○, 경기>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 이번 기회를 통해 일반농산물도 GAP 농산물과 같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되고, 농약 가격 표시 및 가격 안정도 함께 해결토록 개선<임○○, 충북>

| |
|--|
| <p>※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란?</p> <p>(개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을 설정, 기준에 따라 안전성 적부 판단, 기준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적용, 유통 차단</p> <p>(목적) 국산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p> <p>(근거)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p> <p>(시행시기) 1차(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및 2차(전체 농산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p> <p>(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p> <p>(출처) 농림축산식품부</p> |
|--|